



주간통일정세 2009-19(2009.05.06~05.10)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09-18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 김정일, 희천시 산업시설 현지지도(5/9,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자강도 희천시에 있는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청년전기연합기업소, 희천정밀기계공장 등을 현지지도했다고 북한 언론매체들이 9일 보도
- 희천에는 군수시설이 밀집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수산업을 책임진 전병호 노동당 군수공업부장이 수행해 눈길을 끌었으며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도 수행원에 포함

##### ● 김정일, 제10215군부대 대학 시찰(5/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10215군부대 대학을 시찰했다고 보도, 방송은 “김정일 동지가 제10215군부대 대학을 시찰했다”며 “(김 위원장은) 학장의 안내를 받으며 김일성 전 국가주석의 현지지도사적비와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 등을 돌아봤다”고 보도
- 통신은 또 “김정일 동지는 군사연구실을 돌아보며 교육실태를 구체적으로 요해(깨달아 알아냄)했다”며 “원리교육과 동작교육을 실속 있게 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고 학생들을 높은 군사지식과 지휘능력을 소유한 유능한 지휘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물교육과 직관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원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부연
- 시찰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김기남 비서와 국방위원회 장성택 당 중앙위원, 인민군 이명수 대장 등이 동행

#### 나. 정치 관련

##### ● 北대남해외공작기구, 정찰총국으로 통합(5/10, 연합)

- 북한이 각종 대남, 해외 공작업무를 하는 노동당 35호실과 작전부를 노동당에서 떼어내 인민무력부의 정찰국으로 통합, ‘정찰총국’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알려짐.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10일 이같이 전하고 정찰총국장엔 상장(중장) 또는 대장급의 현역 장성이 임명됐다고 소개
- 정찰총국은 인민무력부 산하 기구이지만 오랜 기간 노동당 작전부장을 맡아온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는 것으로 전해짐. 이에 따라 북한 군부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됐으며, 정찰총국



은 총정치국, 총참모부와 함께 북한 군부의 3대 실세기구의 하나로 급부상

- 이번 개편 과정에서 35호실, 작전부와 함께 노동당의 3대 대남, 해외 비밀 공작기구중 하나였던 대외연락부는 대외교류국으로 축소돼 내각에 배속되고 강관주 대외연락부장도 국장으로 직급이 강등된 것으로 알려짐. 강관주가 지난 3월 선출된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에서 빠진 것도 이때문인 것으로 전해짐. 그러나 대외교류국은 대외연락부의 대남 공작 및 조총련 업무를 전부 그대로 관장한 채 내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소식통은 “대외교류국은 김정일에 대한 직보체제도 유지하고 있으나,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 이후 국정 전반을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총괄하고 있는 만큼 장 부장이 보고받고 있다”고 소개, 이러한 개편 결과 종래 노동당 소속이던 4개 대남 미 해외 부서 중 남북회담 등 대남 정책을 공개적으로 수행하는 통일전선부만 노동당에 남게 되었음.

#### ● 조평통, 진보통일운동세력 탄압 비난(5/9, 조평통 서기국 보도)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9일 ‘서기국 보도’를 내고 행정안전부가 ‘불법·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한 단체들을 공익활동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 등을 가리켜 “시민사회단체들과 통일애국세력을 거세말살” 하려는 “탄압수법들”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평통 서기국 보도는 또 ‘친북좌익 척결’을 내세우는 국민행동본부의 애국기동단 발족에 대해서도 “진보통일운동 세력들에 대한 탄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정부 투쟁을 선동

#### ● 조평통, 남북대화, 논의 여지 없다(5/9, 조평통 대변인 담화)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한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제기를 북한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전면부정, 전면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를 공공연히 중상모독하고 노골적으로 부정해 나선 조건에서 북남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고 언급
- 조평통은 9일 ‘대변인 담화’에서 제성호 인권대사의 ‘탈북자 정착촌 건설’ 발언과 허철 평화외교기획단장의 방미시 탈북자 및 현대아산 직원 억류 문제 협의 등을 들어 “이명박 패당이 우리의 거둬드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고 주장
- 담화에서 북한은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로서 애당초 인권문제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주장

#### ● 범민련 북측본부,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석방 촉구(5/8, 범민련 북측본부 성명)

-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는 8일 경찰청과 국정원이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규재 의장을 체포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 “통일애국세력을 완전히 숙청해 버리려는 전면적인 탄압책동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남측의 각 계층이 이 의장에 대한 석방운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北적십자, 南이산가족행사 비난(5/8,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 북한의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통일부가 4월 주최한 “2009 이산가족 초청행사”를 “북남관계 악화의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광대극”이라고 비난하며 이산가족들에게 반정부 투쟁을 선동
- 적십자회 대변인은 “6.15이후 활발히 진행돼오던 북남 사이의 흠어진 가족, 친척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이 전면 차단되고 최악의 국면에 처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반공화국 대결책동 때문”이라고 주장
- 그는 “남조선의 흠어진 가족, 친척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은 사태를 바로 보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책동에 미쳐날뛰는 리명박 패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선동

● **北, 대북 적대 美와 대화 무용(5/8, 북한 외무성 대변인 입장 발표)**

-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8일 오바마 미 행정부의 100일간의 정책동향을 본 결과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에선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우리는 이미 밝힌 대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적대시하는 상대와 마주 앉았댔자 나올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최근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은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결코 그 누구의 주의를 끌어 대화나 해보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입장 발표에서 “현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평화적 위성 발사를 두고 ‘도전’이니 ‘도발’이니 하면서 엉당한 징벌을 가해야 한다고 하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우리 제도에 대하여 ‘폭정’이니 ‘불량배 정권’이니 하는 등 전 정권이 일삼던 적대적인 험담들을 그대로 받아 외우고 있다”고 비난
- 그는 또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지난 3월 ‘키리졸브’와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해 북한의 “안전을 심히 위협”했으며, “평화적 위성발사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 가 제재를 실행에 옮김으로써 우리의 국방공업을 물리적으로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



- **北관변단체들, 잇달아 대남 비난(5/7, 연합)**

  - 북한이 각종 단체들을 잇달아 동원, 대남 비난을 강화, 북한의 ‘조선인권연구협회’는 7일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남한 정부가 5.1 노동절 기념행사 및 용산참사 100일 집회를 강제 진압했다면서 “야만적 폭압”이라고 비난하고 남한 사회의 반정부 투쟁을 선동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또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청년학생분과위원회도 7일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핵심간부에 대한 법원의 이적단체 규정과 실형 선고를 비난하면서 석방을 촉구
  
- **北, 광명성2호, 위성관측·관제시험 정상 진행(5/7,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 북한의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 ‘광명성2호’의 정상궤도 진입을 재차 강조하면서 “위성관측과 관제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
  - 이 위원회 대변인은 7일 광명성2호 발사 한 달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위성에서 보내오는 각종 계측자료들을 수신 분석했다”며 “지상관제초소에서 보내는 조종구령에 따라 위성의 동작상태를 변화시키고 지상의 여러 지역에 전개되어있는 중계통신초소에서 위성을 통한 중계통신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
  - 대변인은 “이미 공개된 470MHz로 지구에 전송하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김정일 장군의 노래’ 선율과 위성자료에 대한 관측을 통해 그리고 지상에 전개된 궤도추적탐지기를 비롯한 측정수단들에 의해 우리의 위성이 정확히 궤도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주장
  - 그는 “운반 로켓과 위성에는 궤도측정과 자료전송을 위하여 원격측정장치와 궤도측정장치를 비롯한 측정 및 송신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에는 궤도추적탐지기와 원격수신장치를 비롯한 측정수단들을 전개했다”고 소개
  - 대변인은 “이번에 진행된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의 발사를 통해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초기에 계획한 종합적인 위성발사관제체계 수립과 위성궤도진입, 위성에 의한 시험통신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함으로써 평화적 우주개발활동에서 큰 걸음을 내디디게 됐다”고 자평
  
- **조선신보, PSI 전면참여시 남북관계 파국(5/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7일 ‘남조선의 PSI 전면참가 동족대결 책동으로 규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문가들은 남조선이 현 정세 속에서 PSI(확산방지구상)에 전면참가를 선언한다면 북남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정부의 PSI 전면참여 발표가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에서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일로 미뤄졌다가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 “발표 시기의 변경은 PSI가 북남관계에 가져다주는 부정





- 합, 국토수호 등 3개의 보조 게임으로 이뤄졌고 게임별로 임무를 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좌우키와 선택키만으로 게임을 할 수 있음. ‘왕대 설명’은 고구려 33대 왕들을 찾는 게임이며, ‘영토 통합’ 게임은 임무를 완수하면 고구려에 통합된 13개 속국들의 이름과 영토를 보여주고 ‘국토 수호’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지키는 게임임.
- 이 사이트는 또 4명이 돌아가며 2명씩 고스톱을 치는 ‘맞고’를 비롯해 테트리스를 하면서 오목을 두는 ‘알밤 때리기’, 1970년대 일본의 인기 만화영화를 본뜬 ‘인조인간 캐산’, 자동차 경주인 ‘모험 레이싱’, 북한 해수욕장 송도원에서 다이빙을 하는 ‘물에 뛰어들기’, 금강산 특산물을 찾는 ‘금강산관광 길에서’ 등의 게임도 선보였음.
  - 이들 게임은 남한이나 해외동포 휴대전화 사용자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이트에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 게임들을 이용 또는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음.

#### ● WHO, 北에 신종플루 치료제 제공(5/8,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에 인플루엔자A(H1N1, 신종플루)의 발생에 대비해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제공, WHO 제네바 본부의 스티븐 라우어 공보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전화통화에서 WHO가 72개 개발도상국에 총 240만 명 분의 타미플루를 제공기로 함에 따라 북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하고 지원량은 “비상시에 대비한 목적에 충족할 만한 분량”이라고 밝힘.
- 대북 지원용 타미플루는 5월 5일 스위스와 미국, 두바이 등 세 곳에서 선적돼 이미 운송되고 있다고 RFA는 8일 보도

#### ● 北, 최초의 ‘실내 축구 경기장’ 건설 계획(5/5, 연합뉴스)

- 북한이 북한 최초의 실내 축구 경기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북한의 박길우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밝힘.
- 박 부위원장은 5일부터 8일까지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열리는 제9차 ‘5.21건축축전’ 개막식 참석 후 조선중앙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축전은 각 도, 시, 군 소재지 형성계획(도시계획)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처음 건설되게 되는 실내 축구 경기장, 골조형 무보식 살림집과 양강도 안의 철도역 건물들에 대한 설계형상 모집을 위주로 하면서 과학논문 발표회, 건축설계 프로그램 및 다매체 편집물 창작경연 등으로 진행되게 된다”고 소개

#### 라. 군사 관련

#### ● 北, 砲사격·전투기 출격 2~6배 증가(5/9, 조선일보)

- 북한군이 올 들어 잇단 대남 강경 성명을 발표하며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백령도·연평도 인근 등 서해 북부지역에서 해안포를 비롯한 각종 포 사격과 전투기 훈련 횟수를 지난해에 비해



2~6배가량 늘린 것으로 8일 밝혀짐. 북한 경비정이 2~3월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세 차례나 침범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짐.

- 해병대 등 군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1월 17일 ‘전면 대결태세 진입’ 성명을 발표한 뒤 서북 지역의 해안과 섬에 배치된 구경 76.2mm 및 130mm 해안포, 152mm 곡사포 등의 실사격 훈련을 강화, 연평도 오른쪽 북쪽의 대수압도 인근에서는 울 들어 현재까지 19회에 걸쳐 1000여 발의 포사격 훈련을 했으며, 포탄이 해상에 떨어지면서 생겨난 대형 물기둥도 관측됐다고 해병대 관계자는 전언, 해병대 관계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해안포 사격훈련이 최대 2배가량 늘었고 대부분 갯도 밖으로 노출돼 있어 언제든지 사격할 수 있는 상태”라고 언급

● 北, 미사일 시험장 건설 서둘러 건설(5/6, 연합)

- 북한이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새 장거리 미사일 시험장 건설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완공 시기가 예상보다 수개월 앞당겨질 전망, 또 북한이 지난 2006년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차량 및 사람이 활발히 움직이는 등 핵실험 준비 징후를 보이고 있어 관계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정부 소식통은 6일 “북한이 최근 동창리 시험장에 장비와 인력을 종전보다 많이 투입해 공사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초 금년 말쯤 완공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수개월 앞당겨질 것 같다”고 언급, 북한은 8년 전 동창리 시험장 건설을 시작해 2008년 9월까지 80%의 공정을 보였음.
- 동창리 시험장은 북한이 지난달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시험장보다 훨씬 크고 현대화된 설비를 갖추고 있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용 우주발사체를 모두 발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됨.

마. 사회·문화 관련

● 北조동혁, 아시아레슬링서 금메달 획득(5/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레슬링 선수들이 최근 태국에서 열린 2009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따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
- 북한의 조동혁은 자유형 60kg급 경기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양경일은 자유형 55kg급 경기에서, 한금옥은 여자 51kg급 경기에서 각각 2위에 올랐음. 양춘성은 자유형 66kg급 경기에서, 김원모와 김금철은 고전형(그레코로만형) 55kg급과 66kg급 경기에서, 최정복은 여자 55kg급 경기에서 각각 3위를 차지



- **北, 평북 초장리서 석굴암 유적 발굴(5/9, 조선신보)**
  - 평안북도 광산군 초장리에서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석굴암 유적이 발굴됐다고 조선신보가 9일 보도
  - 조선신보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석굴암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새로 발굴된 석굴암은 평북 광산군 초장리 소재지에서 동북쪽으로 3km정도 떨어진 통경산 기슭의 야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어 일명 ‘통경산 석굴암’으로 불린다고 설명
  -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장철만 연구사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통경산 석굴암은 지금까지 알려진 남반부의 경주 석굴암이나 군위 석굴암에 비해 외부 생김새가 특별히 크고 웅장하며 기묘해 학계의 특별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호주 국제현대미술전에 北작품 첫 전시
  
- **호주 국제현대미술전에 北작품 첫 전시(5/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미술작품들이 오는 12월 호주에서 열리는 국제 현대 미술전 시회에 처음으로 전시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
  -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12월 호주 브리스번의 퀸즐랜드 아트 갤러리에서 3년마다 열리는 ‘제6회 아시아·태평양 트리엔날레 컨템포러리 아트’에 처음 참가하며, 현재 전시 작품 선정에 대한 논의가 전시 기획측과 북한 당국간 순조롭게 진행 중임.
  - 북한 작품 전시 기획자인 영국출신의 니컬러스 보너는 “북한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를 운영하는 등 북한과 인연이 깊은 데다 평소 북한의 현대 미술작품들도 다소 수집한 경험을 살려 이번 전시회를 기획했다”며 “이번 전시회에는 남한의 작가도 초청돼 남북한의 현대 미술을 비교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
  
- **평양시 막걸리·감주 경연(5/6, 조선중앙통신)**
  - 평양시 막걸리·감주 경연이 5일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이번 경연에는 선발된 20여개의 단체와 공장, 가정주부가 참가해 쌀, 찹쌀, 강냉이, 밀 막걸리와 쌀과 국수를 씻은 물로 담근 감주 등 100여가지의 음료를 출품
  
- **北신종플루 방역 강화, 아직 감염자 없어(5/6,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선 아직 인플루엔자A(H1N1.신종플루)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북한 당국은 “고도의 경계태세를 가지고 방역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 북한 국가비상방역위원회의 박명수 부위원장은 중앙통신과 인터뷰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 특히 발생지역들에서 오는 인원들에 대한 검병(檢病)을 국경지역에서부터 철저히 진행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격리시켜 확진될 때까지 의학적 감시를 하고 있



다”고 설명

- 북한 보건 당국은 또 TV와 출판물을 통해 각국의 신종 플루 발생경위와 상황 등을 신속히 알리고 신종 플루에 대한 상식과 예방법을 홍보하며 주민들에 대한 검병을 매일 실시하고 있고, 일반 감기와 신종 플루를 감별하기 위한 진단체계를 만들고 “중양으로부터 하부 말단까지” 전염병 발생 통보체계를 세워놓았다고 박 부위원장은 설명

## 2. 대외정세

### 가. 6자 회담관련

#### ● 푸틴, 6자회담으로 복귀 촉구(5/10, 연합)

-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북한문제에 대해 침착한 대응과 함께 군비경쟁으로 치달아서는 안된다고 경고, 푸틴 총리는 방일에 앞서 10일 일본 언론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 복귀를 당사국에 촉구
- 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고조되거나 지역 불안정을 촉발, 혹은 군비경쟁으로 치달을 경우 명백한 잘못이 될 것”이라면서 “6자회담 과정에서 이룬 긍정적인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 그는 “우리가 감정이나 절차의 재개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6자회담으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 보즈워스, 러시아 방문일정 취소(5/8, 미국무부)

-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을 순방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8일 밝혔다.
-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보즈워스 대표를 제외한 다른 대표단 멤버들은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음.
- 앞서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 대표단이 12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북핵 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정기적인 일”이라면서 “성 김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가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밝혔다.

#### ● 보즈워스, 北핵실험시 응분의 대가(5/8, 연합)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행정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8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 북한과 양자 및 다자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다룰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



- 6자회담 참가국들을 순방중인 보즈워스 대표는 8일 서울 종로구 도림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북한에 회담 복귀를 촉구
- 보즈워스 대표는 “유 장관과 북한과의 협상 및 6자회담을 평가하고 (사태를) 진전시킬 수 있는 가능한 조치들에 대해 유용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우리의 견해는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
- 이어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과의 대화는 무용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오바마 대통령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협상과 대화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왔다”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갖고 있다고 해석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 ● 中, 곧 대북특사 파견, 6자회담 시동(5/7, 연합)

- 중국은 5개월간 중단됐던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조만간 평양에 ‘장관급’ 특사를 파견,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7일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의 한 고위 외교관은 최근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대북특사를 파견할 계획임을 밝힘.
- 베이징 당국은 북한이 4월 5일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이후 한 달 동안의 냉각기가 지남에 따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시동을 걸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소개
- 중국은 대북 특사로 정식 외교부 라인보다는 당의 중앙대외연락부 채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언, 이와 관련, 지난 1월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던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이 대북 특사로 유력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미국측의 성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한국과 미국측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소개
- 한편 중국은 일본이 6자회담에서 본 주제가 아닌 자국인 피랍 문제 등을 자꾸 거론해 북한측을 자극함으로써 회담 진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내심 불만인 것으로 알려짐.

#### 나. 북·미 관계

##### ● 美국무부, 北과 양자대화 용의(5/9, 연합)

- 미국 국무부는 8일 다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함.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레브리핑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6자회담 참가국 순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힘.



- 우드 부대변인은 “6자회담이 여전히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의 중심에 있지만 다자협상 과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미국은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데 서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 그는 “다자회담을 강화한다는 것이 북미 양자대화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언급
- 우드 부대변인은 6자회담이 초기 이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회담 복귀를 계속해서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 북미 양자대화를 시도하겠지만 6자회담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강력히 시사
- 그는 “중요한 것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려는 노력”이며 “북한에 협상복귀가 북한에 도움이 되며 (6자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계속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

#### ● 北에 갈 계획없다, 딱 자른 클린턴(5/9, 조선일보)

- 힐러리 클린턴(Clinton) 미 국무장관은 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Lavrov)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관련 질문을 받았음. 클린턴 장관은 이에 대해 “그것은 세르게이(라브로프 장관의 이름)가 북한에서 한 일이다. 그는 나의 (평양) 출장을 추진했지만 나는 북한에 갈 계획이 없다”고 답변, 클린턴 장관은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스티븐 보즈워스(Bosworth)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이 지역에 파견 중”이라며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언급만 함.
- 한편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7일 대북 에너지 지원용으로 책정된 예산 9500만 달러와 핵 시설 불능화에 필요한 3450만 달러 등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 세출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미국 여기자들을 억류 중인 것을 이유로 이를 삭감하면서,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고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준수하면 삭감한 예산을 복원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힘.

#### 다. 북·중 관계

##### ● 中대표단, 우의탑 현화(5/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방문 중인 중조우호협회 대표단과 중국 지방정부 대표단, 중국 길림성 인민정부 대표단이 10일 우의탑에 현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중조우호협회 대표단은 해당부문 일꾼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을 전달

#### 라. 기타외교 관계

##### ● 北·페루, 외무장관 회담(5/10, 조선중앙방송)

- 페루를 방문 중인 북한 정부 대표단 단장인 박의춘 외무상이 7일 리마에서 호세 안토니오 가르시아 페루 외무장관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



방송이 10일 보도

- 양측은 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문제와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고 방송은 보도
- 북측에서 대표단 관계자와 페루 주재 북한대사가, 페루측에서 외무부 차관 등 관계자들이 회담에 참가했다고 방송은 소개

● **박의춘 외무상, 페루 대통령 예방(5/8, 조선중앙방송)**

- 페루를 방문중인 박의춘 외무상이 6일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고 조선중앙방송이 8일 보도

● **北·쿠바 외교장관회담, 협조합의서 체결(5/6, 조선중앙통신)**

- 비동맹운동(NAM) 조정위원회 각료급회의 참석을 위해 쿠바를 방문한 박의춘 외무상이 4일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상호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 양측은 회담을 마친 뒤 양측 ‘외무성 사이의 협조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통신은 보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음.

● **北김영남, 남아공·짐바브웨 순방 출발(5/6,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짐바브웨를 순방하기 위해 6일 특별기편으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대표단에는 리용남 무역상과 김형준 외무성 부상도 포함

### 3. 대남정세

● **개성공단, 보건위생교육 실시(5/8, 연합)**

-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공단 입주기업 법인장 100여명을 대상으로 보건위생 및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힘. 6일 진행된 보건위생 교육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사무관이 참석, 식품을 매개로 한 질환의 증상과 예방법, 공단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공중위생 관리 강화 방안 등을 강의했다고 관리위는 소개
- 이 교육은 4월 개성공단 한 업체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대거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복통을 앓은 이후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정부 당국자는 소개

● **정부, 대북지원단체 월드비전 방북승인(5/8, 연합)**

- 정부가 민간단체 방북을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인 월드비전이 정부 승인을 받아 9~12일 평양을 방문  
- 통일부 당국자는 8일 “월드비전 대표단 4명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고 소개한 뒤 “정부는 민간단체의 방북과 관련, 사안의 시급성, 방문 목적, 대상 등을 고려, 선별적으로 허용한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 월드비전은 평양과 평안북도 정주, 황해남도 배천 등지에서 씨감자 사업장 모니터링 등을 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짐.

### ● 北, 개성공단 2차 접촉 빨리 응하라(5/6, 연합)

-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에서의 2차 남북 접촉을 재촉하는 내용의 문건을 우리 측에 보내온 것으로 6일 확인됨.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 개성공단 관리 주체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4일쯤 2차 남북 접촉에 관한 석장의 문건을 보내왔다”며 “남측이 빨리 접촉에 응하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이란 식의 내용”이라고 소개
- 북한은 4월 21일 1차 남북 접촉 때 개성공단의 북측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2차 접촉 날짜는 남한이 가급적 빨리 잡아달라고 요청했었음.
- 통일부 관계자는 “2차 접촉 날짜와 의제 등을 확정해 북한에 통보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2차 접촉에 관한 남북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대북 소식통은 “공단 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들이 6일 개성에 갔지만 북측 대표들이 평양에 있어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소개
- 정부는 이날로 개성공단에 38일째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44)씨 문제를 2차 접촉 때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2차 접촉을 확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北, 南기업에 ‘쌀 사 달라’ 요청(5/6, 연합)

- 최근 북한이 대북 사업을 하는 남한 기업들에 “쌀을 사 달라”고 부탁할 만큼 식량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6일 알려짐.
-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 2~3곳이 최근 ‘돈을 줄테니 쌀 좀 사달라’는 북측 부탁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언급, 그러나 북한이 지불하겠다는 액수가 국제 쌀 시세(톤당 1100달러)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 실제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은 중국에서 식량을 살 경우 국제 시세의 11~15% 가격만 지불하고 있음. 당국자는 “북한이 러시아 쌀을 사달라고 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미질(米質)을 요구한다고 한다. 이는 꼭 쌀을 먹어야 할 계층에서 못 먹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설명
-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북한 소식지에서 “4월 들어 평양에서도 식량 배급이 제대로 안 된다”고 했고 대북 소식통은 “군대와 당 간부까지 굶고 있다는 소문이 많다”고 소개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작년 11월~



올해 10월 178만6000 톤의 식량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할 상황인데도 (지난 3월) 미국의 식량 지원을 거부했다”며 “4월부터 식량 배급이 절반으로 줄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한·미 “北 핵실험 막을 방안 없다”(5/10)

- 북핵 현안에 정통한 정부 고위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에 착수하고 2차 핵실험을 경고하는 등 연일 위기를 높이고 있지만 이를 제어할 뾰족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없다며 이같이 토로했음.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지난 8일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을 예방한 뒤 ‘북한의 핵실험을 막을 방법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많지 않다”면서 “북한이 하려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음. 보즈워스 대표가 중국(7일)과 한국(8~11일)을 잇따라 방문, 북한의 연이은 도발행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은 도출되지 못한 것임.
- 이 당국자는 “북한도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의 의중이 대화에 개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양자대화는 북한이 응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북한은 8일에는 외무성 대변인의 입을 빌어 “우리를 변함없이 적대시하는 상대와 마주 앉았댔자 나올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미국과의 양자대화에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음.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그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볼 때 미국과의 대화에 대해 관심이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음.

##### ○ 美 국무부 “北과 양자대화 용의”(5/9)

- 미국 국무부는 8일 다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음.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6자회담 참가국 순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음.



- 우드 부대변인은 “6자회담이 여전히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노력의 중심에 있지만 다자협상 과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미국은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데 서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자회담을 강화한다는 것이 북미 양자대화의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 우드 부대변인은 6자회담이 초기 이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회담 복귀를 계속해서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 북미 양자대화를 시도하겠지만 6자회담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미국의 입장에서 6자회담은 장기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임. 그는 “중요한 것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려는 노력”이며 “북한에 협상복귀가 북한에 도움이 되며 (6자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계속 보여주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보사항이라며 언급하지 않았다.

#### ● 보즈워스 “北핵실험시 응분의 대가”(5/8)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행정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8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보즈워스 대표는 또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 북한과 양자 및 다자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다룰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 취임 이후 두번째로 6자회담 참가국들을 순방중인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북한에 회담복귀를 촉구했다.
- 보즈워스 대표는 “유 장관과 북한과의 협상 및 6자회담을 평가하고 (사태를) 진전시킬 수 있는 가능한 조치들에 대해 유용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우리의 견해는 매우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협상테이블로 돌아가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계속 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면서 “6자회담이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 노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즈워스 대표는 “우리는 또한 다자회담을 강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양자적 토대위에서 북한 문제를 다룰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즈워스 대표는 ‘현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한 가능한 방안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은 없으나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나머지 5개국은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최근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하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지 않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촉구했음.
- 이어 보즈워스 대표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북한을 적대시하는 미국과의 대화는 무용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오바마 대통령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협상과 대화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해왔다”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갖고 있다고 해석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 이날 오후 중국을 떠나 한국에 도착한 보즈워스 대표는 오후 현인택 통일장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잇따라 면담했으며 9일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함. 보즈워스 대표는 주말을 한국에서 보낸 뒤 11일 일본으로 떠날 예정임.

#### ● 中美 양자회동..6자회담 재개 시동(5/7)

- 중국과 미국이 7일 베이징에서 양자 회동을 갖고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협의했음.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베이징에 도착해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잇따라 만나 탈퇴를 선언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문제를 비롯한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협의했음.
-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중미 회동이 끝난 뒤 숙소인 웨스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제츠 부장과 우다웨이 부부장과 만나 우리가 처한 현실과 나아갈 바에 대해 심도있고 좋은 논의를 했다”고 말했음. 그는 “미국은 북한과 다자 및 양자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해 왔다”면서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재의 긴장과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고 말했음.
- 중국은 이번 회동에서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조만간 평양에 ‘장관급’ 특사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의 한 고위 외교관은 최근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대북특사를 파견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성 김 수석대표 등 미국 대표단은 이날 오후 서우두(首都) 공항을 통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음. 6일 출국한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중국 방문에 이어 8일부터 11일까지 방한, 북핵 문제를 논의한 뒤 일본(11일), 러시아(12일) 등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국들과 잇따라 협의를 진행함.



● “中, 곧 대북특사 파견…6자회담 시동”(5/7)

- 중국은 5개월간 중단됐던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조만간 평양에 ‘장관급’ 특사를 파견,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의 한 고위 외교관은 최근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대북특사를 파견할 계획임을 밝혔다.
- 베이징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5일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이후 한달간의 냉각기가 지남에 따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시동을 걸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들은 말했다. 중국은 대북특사로 정식 외교부 라인보다는 당의 중앙대외연락부 채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 이와 관련, 지난 1월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했던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이 대북 특사로 유력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은 그러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미국측의 성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한국과 미국측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7일 베이징에 도착한 것도 중국측의 대북특사 파견 방침과 맞물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시동이 걸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 외교부 “6자회담 대안 현재로선 생각안해”(5/7)

- 정부는 북한의 거부로 위기를 맞고 있는 북핵 6자회담에 대해 현재로선 대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현재로서는 6자회담이 가장 좋은 틀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 문 대변인은 “현재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중국과 한국, 일본, 러시아를 순방하며 6자회담 재개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6자회담으로 가는 중간단계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지금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좀 더 전개돼 나가는 상황을 봐야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 “北 핵실험·ICBM 위협 심각한 유감”(5/5)

- 외교통상부 오 준 다자외교조정관은 4일(현지시간) “6자회담을 통한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위반하면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한 조치 등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 ‘2010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오



조정관은 이날 유엔 기조발언에서 “북한 핵문제는 NPT가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해 “NPT 및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의무와 9.19 공동성명 및 6자회담 후속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음.

- 오 조정관은 NPT 체제 강화를 위해 포괄적 안전조치와 추가의정서 보편화를 통한 IAEA 안전조치체제 강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기 발효와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협상 개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보장과 악용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안전조치 채택, NPT 탈퇴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음.

#### ● 체코 총리 “북핵 개발 극도로 위험”(5/4)

- 미렉 토폴라넥 체코 총리는 5일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극도로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음. 현재 EU 의장국을 맡고 있는 체코의 토폴라넥 총리는 이날 프라하를 방문중인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음.
- 아소 총리는 “6자회담이 북한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실용적인 구조라는데 생각을 같이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6자회담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열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음.

#### 나. 미·북 관계

#### ● “美육군, 北남침 가정할 전쟁게임”(5/10)

- 미국 육군대학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전쟁이나 위기사태에 대비해 실시하는 여러 가상 전쟁게임에는 북한의 남침을 상정한 것도 포함되어 있음. 시사 주간 타임은 9일 인터넷판에서 미 육군대학이 미래의 군사적 사태에 대비해 실시하는 가상 전쟁게임에는 북한의 남침,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미 국경도시인 엘 파소 일부 지역을 점령하는 사태, 미국 근해에 핵물질이 떠있는 사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이 인종분규 종식을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접경지대에 출동하는 사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
- 가상 전쟁게임은 2018년부터 2025년 사이의 국제정세를 감안해 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들을 상정한 것임.
- 폴 도일 육군중령은 “현재의 작전환경을 토대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분쟁 관련 전쟁 게임 입안자인 제이 넬슨은 “미국이 복수의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가운데 더이상 유일한 초강대국의 지위는 잃어버리고, 여러 열강중 하나에 불과한 상태를 가정해 실시중”이라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고 말했음.



- 전쟁개임을 하는 주요 목적은 국무부, 특별작전팀, 정보기관 등 미 정부 전체 차원은 물론 주요 우방들과 함께 각종 위기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것으로 호주, 독일, 영국군 장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음.
- 미군 태평양사령부가 당면할 수 있는 북한 관련 전쟁 게임의 경우 2016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새 지도자가 핵무기 개발을 위해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것으로 시작됨.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을 농축하는 발전소가 적발되고, 유엔 안보리가 이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북한은 수천명의 군사를 난민들속에 위장침투시켜 군사분계선(DMZ)을 넘어 남침하는 사태가 발생함. 한마디로 재래식 전쟁과 게릴라 소탕작전을 병행해야 하는 예상기 힘든 복잡한 성격의 전쟁사태에 직면하는 시나리오임.
- 미 육군의 하비 페릿 대변인은 한반도 정세를 가정한 전쟁게임의 결론은 군사적인 측면 외에 정보 및 문화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공격에 대해 외교적, 인도주의적 해결책이나 다른 우방들의 개입과 같은 해결책까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 빅터 차 “고어, 대북특사로 보내야”(5/10)

- 조지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9일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적 여기자 2명의 석방을 위한 미국의 고위급 대북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면서 앨 고어 전 부통령을 특사 후보로 제안했음.
- 6자회담 미국측 차석대표를 맡기도 했던 차 교수는 이날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적 유나 리와 로라 링 기사를 구하기 위해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음. 그는 이들 두 여기자가 앨 고어 전 부통령이 만든 커런트TV 소속인 것과 관련, “미국은 이들 두 여성을 귀국시키기 위해 북한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어 전 부통령이 분명한 후보”라고 말했음. 그는 “고어 전 부통령을 특사로 보냄으로써 외교적 선례를 남기는 부담을 피한 채 두 여기자의 안전한 석방에 필요한 어떤 사과든지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차 교수는 또 “북한은 그(고어)의 지위를 존중할 것이며, 그가 이 문제에 갖고 있는 이해관계는 임무의 신뢰를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런 인도적 차원의 노력이 (북미간) 외교적 상황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고어 전 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평화 메시지를 거듭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포용(engage) 의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북한의 강요 전략에 반응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원칙적으로 반응을 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무고한 여성들이 생지옥같은 북한의 수용소에 수감되는 것



을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면서 “이들의 안전한 귀국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거듭 지적했음.

### ● “美, 北주민 돕는 구체조치 취해야”(5/9)

- 미국 하원의원이 최근 하원 본회의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한 것으로 9일 확인됐음. 미 하원의 조 피츠 의원(공화.펜실베이니아주)은 지난 6일 하원 본회의 발언을 통해 최근 ‘의회인권위원회’가 탈북자들을 면담한 사실을 소개하며 “잔인한 독재자에 의해 북한 주민들이 끔찍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탈북자들로부터 직접 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외교소식통이 전했다.
- 미 하원 의사록에 따르면 피츠 의원은 “국제사회와 미국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잘 계획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강제수용소, 심한 고문, 노예노동, 강제낙태, 탈북자 처형 등 북한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참상들에 대한 수많은 보도가 있어왔다”고 참혹한 북한 인권실태를 상기시켰음.
- 피츠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을 돕는 데 있어 더 든든한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미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며 작년 9월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한 사실을 언급한 뒤 “불행하게도 그 법이 허용하고 있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인권법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음.
- 그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이 혼자가 아니고, 잊혀진 존재도 아니라는 메시지를 듣도록 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전세계에는 북한 주민들의 곤경에 대해 깊게 우려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 ● 北외무성 “대북 적대 美와 대화 무용”(5/8)

-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은 8일 오바마 미 행정부의 100일간의 정책동향을 본 결과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에선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우리는 이미 밝힌 대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적대시하는 상대와 마주 앉았댔자 나올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하고 “우리가 최근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은 나라의 안전과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결코 그 누구의 주의를 끌어 대화나 해보자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입장 발표에서 “현(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평화적 위성 발사를 두고 ‘도전’이니 ‘도발’이니 하면서 엉당한 징벌을 가해야 한다고 하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우리 제도에 대하여 ‘폭정’이니 ‘불량배 정권’이니 하는 등 전 정권이 일삼



던 적대적인 협담들을 그대로 받아외우고 있다”고 비난했음.

- 그는 또 “오바마 행정부는 정권의 자리에 들어왔기 바쁘게” 지난 3월 ‘키리졸브’와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실시해 북한의 “안전을 심히 위협”했으며, “평화적 위성발사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가 제재를 실동에 옮김으로써 우리의 국방공업을 물리적으로 말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 美의회, 北비핵화 예산안 전액 삭감(5/8)

-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행정부가 대북 에너지 지원용으로 책정한 예산을 포함해 북한의 비핵화에 사용할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했다.
- 세출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2009회계연도의 전쟁관련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북한 비핵화 지원 예산안을 심의, 북한이 지난달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위반한 데다 6자 회담을 거부하고 불능화한 핵시설을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한 점, 미국 여기자 2명을 억류중인 점 등을 이유로 미 국무부가 대북 에너지 지원을 위해 요청한 9천500만 달러를 삭감했음. 세출위는 “만약 북한이 협상장으로 돌아오고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준수한다면 그 때 가서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말했음. 세출위는 또 에너지부가 산하 국립핵안보국(NNSA)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폐기하는 작업을 위해 요청한 3천450만 달러도 “현 시점에서 불필요”하다면서 삭감했음.
- 세출위는 애초 국무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요청한 1억4천200만 달러 중 에너지 지원용 예산 9천500만 달러를 제외한 비확산과 군축기금(NDF) 항목의 4천700만 달러도 절반을 삭감했음. 미국의 추정 예산안은 하원 본회의를 거친 뒤 상원과 협의를 통해 빠르면 이달 안에 최종 확정됨.

#### ● “美 디트라니 북한정보 담당관 조만간 방한” <RFA>(5/8)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8일 오후 한국을 방문하는 데 이어 조지프 디트라니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 북한담당관도 조만간 방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했다. 디트라니 담당관은 미국의 각종 정보기관들이 수집한 북한 정보를 총괄함.

#### ● 클린턴 “방북 계획없어”(5/8)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장관은 7일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미 긴장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자신이 직접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음.
- 클린턴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미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



등을 위해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처럼 방북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나는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 대신 그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다음 단계 진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지역에 파견한다”고 말해 북한측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을 방문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클린턴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이 최근 북한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6자회담의 틀 안에 복귀시키는 노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는 그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 라브로프 장관도 이란 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서도 협상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다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와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주도적 위치에서 다른 나라들과 협력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한 진전 모색 방안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 ● 美관리 “北과 새 형태 다자대화 시도 고려”<RFA>(5/7)

-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끝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형태의 다자 대화’를 시도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전했다.
- 방송은 지난달 27일 허철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만난 미국의 고위급 관리가 “북한이 북핵 6자회담에 끝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과 양자 대화를 시작하기 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다자 협의를 통해 핵 문제를 비롯해 북한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당시 한미간 협의 내용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 미국의 이 고위급 관리는 또 “앞으로 관련국간 어떤 형태의 다자적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한국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미국 관리의 “6자회담의 그간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북한이 참여를 거부하더라도 6자회담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 허철 단장은 지난달 26일 방미, 알렉산더 아비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성 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 등과 회동했었다.
- 한편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 또는 북.중간 양자회담 개최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이 신문이 7일 보도했다. 위 본부장은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폐지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북미간 또는 북중간 “양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도선으로 작용한다면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 ● 北신문 “美핵우산에 핵억제력 강화”(5/5)

- 북한 노동신문은 5일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남한에 대한 핵우산을 유지할 것이라는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비난하면서



핵억제력 강화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 이 신문은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다’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윌터 샤프가 또 다시 우리 공화국을 심히 자극하는 호전적인 망발을 늘어 놓았다”며 전작권 전환 후 핵우산 유지, 검증가능한 핵폐기,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의 언급을 지적했음. 노동신문은 “북침전쟁계획의 완성과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떠들면서 우리더러 핵을 폐기하라고 하는 것은 무장을 놓고 손들고 나앉으라는 소리와 같다”며 “자위적 군사력이 없으면 자주권 수호는 물론 나라와 민족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우리는 미제의 날로 노골화되는 핵전쟁 책동에 대처해 자위적 핵전쟁 억제력을 갖춘 것이 얼마나 정당한 것인가를 더욱 절감하고 있다”며 “나라의 자주권을 한치라도 침해, 유린하려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강경고압자세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민의 드팀(흔들림) 없는 배짱이고 기질”이라고 강조했다.
- 또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가로타고 앉으려는 적대세력의 기도가 보다 선명히 드러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며 “미 호전세력은 상대를 푹푹히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北붕괴시 중국군 개입 가능성 높아”(5/5)

- 북한이 붕괴할 경우 사태를 안정시키고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도 북-중 국경 인근에 중국군이 투입될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미국 국방부 산하 육군전쟁대학(Army War College) 부설 전략문제연구소(SSI)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대만해협을 넘어서: 대만 문제 이외 중국군의 임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5일 밝혔음.
- 이 보고서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해 미국 정부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데니스 블레이어 국가정보국장(DNI)이 보고서의 서문을 썼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음. 보고서는 “중국군은 (지난 한국전쟁때) 한반도에서 가장 심각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했었다”면서 “중국군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비상 임무를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매우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을 인용, 중국군내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이 중국과 한국, 일본, 미국 사이에 완충지대로 남아있기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중국 대북정책의 근본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안정유지와 평화라고 소개했음. 보고서는 또 중국 고위 인사들은 그동안 ‘중국은 북한이 붕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고 실제로 중국은 지난 수십년간 북한이 기근 및 에너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식량과 연료를 제공하는 마지막 버팀목이었다고 지적했다.
- 뿐만아니라 중국 지도부는 공식 성명이나 출판물, 국영매체 등을 통



해 북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 ‘레짐체인지(정권교체)’를 옹호하지 않은 것은 물론 비공개·막후회의에서조차 북한 정권교체를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해 왔다는 것.

- 보고서는 2006년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의 토론에 참석했던 중국내 북한 전문가들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생겼을 경우 중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보협정을 북한과 맺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취하면 불가피하게 중국을 개입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 지난 1996년 중국의 한 전문가는 “만약 미국의 지도자들이 북한이 붕괴할 경우 미군과 한국군이 중국군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북한으로 진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1950년처럼 또다시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군 고위 인사들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등 북한의 행동에 대해 당혹해할 지는 모르지만 중국은 동북아 지역 안정이라는 중요성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북한을 지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 따라서 북한이 붕괴할 경우 사태를 안정시키고 사회통제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군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 체제가 불안정할 경우에도 중국군이 북-중 국경에 투입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 ● 北외무성 “오바마, 부시와 다른 것 없다”(5/4)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일 자신들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현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에서 “미국이 우리의 위성발사를 한사코 탄도 미사일 발사로 오도하려는 정치적 속셈은 어떻게든 제재의 구실을 만들어 우리의 국방공업을 물리적으로 질식시켜 보려는 데 있다”며 “미국의 현 행정부가 ‘변화’와 ‘다목적 협조외교’에 대해 떠들며 요술을 부리고 있지만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힘으로 압살하려고 광분했던 이전 행정부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문답에서 “미국이 강권으로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키고 구속력도 없는 의장성명을 조작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실행에 옮긴 불법 무도한 도발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직 힘이 있어야 자주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국제관계의 현실이 보여주는 교훈”이라며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천만번 정당하였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다”며 핵억제력 강화 입장을 재확인했다.



### ● 美국방 “한국은 자발적 핵무기 비보유국”(5/4)

-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3일 한국을 ‘자발적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지칭하며 한국의 핵비확산 노력을 높게 평가했음. 게이츠 장관은 이날 미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로 분류한 뒤, 이러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핵확산 방지 문제에 대해 지나친 비판론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 게이츠 장관은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요 외교 목표로 천명한 ‘핵무기 없는 세계(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핵무기 생산을 중단시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공언했다. 이는 매우 훌륭한 목표”라고 전제한 뒤 “이는(핵무기 없는 세계) 모든 인류에게 중요한 목표지만, 이를 달성하기까지는 먼 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핵무기 제조 기술이 이미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상황에서 일시에 모든 핵무기를 제거해내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임.
- 게이츠 장관은 “현실적으로 어느 국가나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문제”라면서 ‘핵 없는 세계’ 달성을 위해서는 핵무기 감축, 핵기술 전파 문제 등을 포괄하는 단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유엔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핵 검증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국 역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및 러시아와의 양자 협정인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의 후속 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게이츠 장관은 덧붙였다.

### 다. 일·북 관계

#### ● 北신문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서 日철저배제”(5/5)

-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일본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군국주의 독사의 전쟁광기’ 제목의 논평에서 아베 전 총리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선제타격 발언 등을 지적하면서 “시야가 좁고 타산이 없으며 감정에만 치우쳐 돌아가는 일본 반동의 정치자세는 만사를 그르치게 할뿐”이라며 “일본 군국주의 독사들은 국제사회의 우환거리”라고 비난했음.
- 민주조선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정세안정은 그 특성과 예민성으로 하여 고도의 과학적 타산과 논리에 기초한 정치적 대응을 요구한다”며 “따라서 모든 국제문제 특히 조선반도 문제 해결과정에는 일본반동들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특히 “이것이 6자회담의 막을 내리면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결론이고 국제사회가 명



심해야 할 교훈”이라고 밝혀 6자회담의 “폐기”를 재차 확인했음.

- 신문은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년속적 일본으로부터 과거범죄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 비상한 의지에 충만되어 있다”며 “필요하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마음의 준비를 가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 라. 기타

##### ● 北-페루, 외무장관 회담(5/10)

- 페루를 방문 중인 북한 정부 대표단 단장인 박의춘 외무상이 7일 리마에서 호세 안토니오 가르시아 페루 외무장관과 회담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10일 보도했음. 양측은 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문제와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방송은 전했다.
- 북측에서 대표단 관계자와 페루 주재 북한대사가, 페루측에서 외무부 차관 등 관계자들이 회담에 참가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 박 외무상은 쿠바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조정위원회 장관급회의에 참석한 후 6일 페루를 방문,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눈바 있음.

##### ● 北, 서북지역 포사격·전투기훈련 강화(5/8)

- 북한군이 올해 들어 대남 강경 성명을 발표하며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서해 북부지역에서 해안포 사격과 전투기 훈련 횟수를 2~6배가량 늘린 것으로 확인됐음.
- 북한 경비정도 지난 2~3월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세 차례나 침범했음.
- 8일 해병대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1월17일 ‘전면 대결태세 진입’ 성명을 발표한 뒤 서북지역의 섬과 해안가에 배치된 130mm와 76.2mm 해안포, 152mm 지상곡사포(평곡사포) 등의 실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연평도 우측 북방의 대수압도 인근에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19회에 걸쳐 1천여 발의 포사격 훈련을 했으며 포탄이 해상에 떨어지면서 생겨난 대형 물기둥도 관측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의 대수압도에는 연평도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27km의 130mm 해안포 8문이, 연평도 북쪽 장재도에는 사거리 12km의 76.2mm 해안포 8문이 각각 배치돼 있음.
- 연평도에서 불과 12km 떨어진 북한 웅진반도와 해주항 주변에는 사거리 17km의 152mm 평곡사포 등이 100여문 이상 배치돼 있으며, 이들 포는 1분당 5~6발을 쏠 수 있음. 해병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해안포 사격훈련이 최대 2배가량 늘었고 대부분 포상전개(갱도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며 “7일 오전에도 포성이 들리는 등 다양한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27일에는 백령도 인근 북한군 제88 혼성포병 여단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하는 등 2~4월에 포성이 급증했다”며 “해안가 동굴진지에 있는 해안포의 위장막이 걷어지고 진지 밖으로 5m 가량 노출된 상태”라고 전했다. 또 서북지역에서 북한 공군의 기지전개와 공대지 공격, 야간 비행훈련 횟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북한 공군은 과거 공군기지 상공을 비행하는 훈련을 했으나 지금은 다른 기지로 전개하거나 공중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훈련으로 바뀌었으며, 1월부터 현재까지 훈련 횟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6배가량 늘어났다고 해병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황해도 과일 비행장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은 지난 1월17일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군이 백령도에서 북쪽 64km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을 1천87회나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 **WHO, 北에 신종플루 치료제 제공(5/8)**
    -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에 인플루엔자A(H1N1.신종플루)의 발생에 대비해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제공했음. WHO 제네바 본부의 스티븐 라우어 공보관은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전화통화에서 WHO가 72개 개발도상국에 총 240만명 분의 타미플루를 제공키로 함에 따라 북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하고 지원량은 “비상시에 대비한 목적에 충족할 만한 분량”이라고 밝혔다.
    - 대북 지원용 타미플루는 지난 5일 스위스와 미국, 두바이 등 세 곳에서 선적돼 이미 운송되고 있다고 RFA는 8일 전했다.
  - **北김영남, 싱가포르 대통령과 회담(5/8)**
    -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7일 싱가포르의 셀레판 라마 나단 대통령과 회담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8일 보도. 양측은 대통령궁에서 열린 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킬 데 대해서와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 회담에는 북측에서 김형준 외무성 부상, 정성일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가, 싱가포르측에서 R.이스와란 통상산업부 고위국무상, 판 영빙 대통령 책임서기 등이 참여했음.
    - 방송은 또 7일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연회가 열려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김영남 위원장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짐바브웨를 순방하기 위해 6일 특별기 편으로 평양을 출발했으며 싱가포르에는 6일 도착했음.
  - **“中칭다오서 탈북자 30여명 체포돼”<소식지>(5/7)**
    - 중국 칭다오(靑島)의 한 탈북자 집결소에서 지난달 28일 탈북자 37명이 중국 공안에 무더기 체포돼 북송될 위험에 처했다고 온라인 북한 소식지 ‘열린북한통신’이 7일 ‘중국 공안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 대북 라디오방송인 열린북한방송(대표 하태경)이 만드는 이 소식지는 “체포된 이들 중에는 생후 8~10개월의 유아를 비롯해 어린이 7명도 포함돼 있다”면서 “지난 3일 이 소식을 전한 중국 공안기관 관계자는 체포된 탈북자들은 곧 중국의 지린(吉林)성 난핑(南坪)과 북한 무산을 경유해 북송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 이들 탈북자는 조선족 브로커들에 의해 집결해 단체 관광객으로 위장, 버스를 타고 탈북 루트중 하나인 중국 국경 도시 윈난(雲南)성의 성도 쿤밍(昆明)으로 갈 계획이었다고 소식지는 말했다.
- “北 박의춘 외상, 10~12일 브라질 방문”(5/6)
    -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브라질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현지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가 6일 보도했음. 보도에 따르면 박 외무상은 오는 10~12일 사이 브라질리아에 머물면서 셀소 아모링 브라질 외무장관과 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음.
    - 신문은 회담에서 양국간 통상 확대 방안은 물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일부 민감한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음.
    - 박 외무상의 방문은 브라질이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한 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르날도 카힐료 초대 평양 주재 대사도 이번 회담에 배석함.
    - 박 외무상은 브라질에 앞서 비동맹운동(NAM) 조정위원회 각료급 회의 참석을 위해 쿠바를 방문했으며, 지난 4일에는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과 만나 협조합의서를 체결했음.
  - 美입국 ‘탈북 난민’ 81명으로 늘어(5/6)
    - 지난달 탈북자 4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2006년 5월 탈북 난민을 처음 받아들인 이후 지금까지 이 법에 의해 입국한 탈북자가 모두 81명으로 늘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6일 전했다.
    - VOA는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난민 입국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지난달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4명중 3명은 여성으로 태국에 체류했으며 다른 한명은 다른 제3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 VOA는 또 ‘방콕 이민국수용소 내부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현재 태국 방콕의 수용소에서 미국행을 기다리는 탈북자는 남성 3명과 여성 1명 등 모두 4명이라고 전했다.
  - “탈북자 中 대사관서 USB 훔쳐”(5/5)
    - 주중 한국대사관에 수용됐던 탈북자 2명이 지난해 12월 영사부 사무실에 침입해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지난해 12월 탈북자 최모씨 등 2명이 영사부 직원의 컴퓨터에 꽂혀 있던 USB를 훔쳐 천장을 뚫고



건물 밖으로 도주했다고 말했다. 이 USB에는 탈북자 관리 장부가 담겨 있었지만 그밖에 한국인과 관련된 각종 기밀이 담겨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탈북자 2명은 영사부에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훔친 USB를 북한에 넘기겠다고 협박하며 거액의 돈을 요구했으며 대사관 측은 다행히 이들을 조기에 붙잡아 USB를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음.

- 다른 소식통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 USB에 외교 기밀이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기밀이 북한으로 건너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중대사관은 당시 총영사를 전보조치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캐나다, 올해 1분기 탈북자 16명에 난민 지위”(5/5)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5일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분기별 보고서를 인용,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탈북자 16명이 대거 난민 지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난민 인정을 받은 전체 탈북자는 총 7명에 그쳐, 올해 첫 분기인 석 달간 탈북자 16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는 점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 이민·난민국의 스테판 매일파트 대변인은 RFA와 인터뷰에서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가 계속 늘고 있어 지금도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 사례가 116건에 달한다”고 소개했음.
- 캐나다 북한인권협회의 이경복 회장은 최근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주요한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했다”며 “캐나다가 국제사회에서 인권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데, 작년 전까지 4명이라는 수는 너무 부끄러운 수치라고 다른 나라의 통계를 비교하면서 정부와 의회에 공식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난민 심사를 통과해 영주권을 받은 탈북자가 만 3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이들이 캐나다에서 출산할 경우 태어난 아기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됨.

### ● “北, 대미·대남 사이버전 전담부대 운영”(5/5)

- 북한이 인터넷을 통해 한국과 미국에 대한 첩보 수집과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전담부대를 확대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음. 정보당국은 4일 북한이 인터넷을 수단으로 대남, 대미 첩보를 수집하고 전산망을 교란하는 사이버전 전담부대인 ‘기술정찰조’를 확대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음. 이 부대는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국 소속으로, 군 컴퓨터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평양의 지휘자동화대학 졸업생 위주로 100여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보당국은 “이 부대의 임무는 군사관련 기관들의 컴퓨터망에 침투해 비밀자료를 해킹하는 등 정보유통체계를 장악하는 한편 필요시 바이러스를 유포해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펜티엄 IV급 등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한 고속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북한군



은 과거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력에 대한 정보 수집, 그리고 미군 인터넷과 첨단 C4I(지휘통신) 체계 교란을 위한 자료 축적에 관심을 가지다가 현재는 사이버전 수행과 군 정보화체계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고 당국은 전했다.

- 특히 미국 국방부가 최근 수년간 미군 인터넷을 조희한 국가를 역추적인 결과 북한이 최다 접속국으로 판명되기도 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군은 정보화체계 확립에 매진한 결과 다양한 군 훈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가운데 ‘100가지 전투방안’이란 소프트웨어는 100가지 컴퓨터 가상전쟁 연습모델로 공격과 방어 전투유형을 담고 있음. 또 실내에서 모형포를 이용해 사격하면 컴퓨터가 명중 여부와 오차, 포 제원 등을 식별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사용 중임.
- 한국군의 전투서열 뿐 아니라 일반부대 사.여단장급 및 특수전부대 대대장급까지의 인물 자료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한미정상회담前 아프간 추가지원 없어”(5/10)

- 정부는 내달 16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개최 전에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 없다고 정부당국자가 10일 밝혔다.
- 이에 따라 내달 중순까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군의 아프간 재파병 여부나 재건지원 확대, 대규모 재정적 기여 등 한국의 아프간 추가지원방안이 발표되거나 방침이 정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정부 당국자는 지난 6일 정부의 아프간 지원 확대 발표 사실을 언급,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경제적 위상, 과거 한국이 받은 지원 등을 감안하면 아직도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있다”며 “이에 따라 추가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그러나 “추가 지원문제는 국제사회의 동향과 관련여건, 우리 정부의 가용 능력 등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 문제는 한미정상회담과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 당국자는 또 “미국도 최근 한국이 아프간 지원을 확대키로 한 데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면서 “최근 발표에 이어 한국 정부가 단기간에 아프간 추가 지원방안을 결정하기 어려운 내부적 사정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현재 정부내에선 아프간에 한국군을 재파병하는 문제를 비롯해 재건지원팀을 250~3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 재정적으로 대



규모 지원을 하는 방안 등이 두루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美 한·미FTA 재협상없이 처리 선호”(5/8)

-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최근 USTR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없이 처리하길 선호하고 있다는 입장을 미 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마란티스 부대표는 상원 재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준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론 커크 USTR 대표는 재협상을 하지 않고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USTR가 한·미 FTA와 관련된 자동차와 쇠고기 등 우려 사항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협정문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기타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뜻으로 풀이됨.
-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는 지금까지 한·미FTA의 일부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안대로 비준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한·미FTA의 협정문 본문의 수정이나 재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한 적은 없음.
-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부시 행정부가 체결한 한·미FTA를 비롯해 의회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파나마·콜롬비아 등과의 FTA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협정문의 본문을 건드리는 재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은 없었음. 따라서 마란티스 부대표가 한·미FTA를 재협상없이 처리하기를 선호한다고 밝힌 것은 기존의 미 정부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미 통상전문가들의 분석임.
- 하지만 마란티스 부대표는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의 공정한 경쟁 확보와 쇠고기 시장 재개방 문제에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가 막대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중요한 전략적 우방과 관계를 강화한다고 믿고 있지만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의 공정한 경쟁 확보와 쇠고기 시장 재개방 문제에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 특별히 우려가 남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14일 워싱턴 DC에서 커크 USTR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한·미 FTA 진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
- 이와 관련 이해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7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4일 열리는 한·미 통상장관회담 의제와 관련해 “계속 밝혀왔지만 재협상이든 추가협상이든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형식은 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음.

### ● “美의회, 한미FTA 늦여름 논의 예상”(5/8)

- 미국 의회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무역문제를 본격 논



의할 수 있는 시점은 늦여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미 하원 의원들이 참석한 한미관계 세미나에서 7일 제기됐음. 또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음. 다이앤 왓슨(민주) 하원의원은 이날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한 미경제연구소(KEI)가 ‘의회와 한국: 한미관계 의회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 의회는 경제위기 등 현안이 많아서 늦은 여름에나 무역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한미 의원협회 미국측 회장인 왓슨 의원은 “한국의 무역정책은 콜롬비아나 파나마에 비해 더 긍정적이고 실행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공통의 이해기반에서 서로 만나 우려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 댄 버튼 (공화) 하원의원은 “한미FTA 처리가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이지만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노조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부 양보가 있어야만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음. 이와 관련, 버튼 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노조의 지지를 기반으로 대선에서 승리했다며 노조가 현재 오바마 행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노조는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 많은 노조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버튼 의원은 “노조를 설득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의 국내정책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와 함께 버튼 의원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문제와 관련, “중국이 충분히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협상을 통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음.
- 에드 로이스(공화) 하원의원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로켓발사 실험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다시 가해야 한다면서 탈북자 면담을 근거로 북한에 대한 경화유입을 막는 금융제재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 로이스 의원은 또 북한의 미사일 관련 기술이 이란에 이전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한국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가 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 정부, 아프간에 7천400만달러 지원(5/6)

- 정부는 6일 국제사회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아프간에 구급차 등 500만달러 상당의 장비를 지원하고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재건팀(PRT) 규모도 85명으로 늘리기로 했음.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프간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위해 253억원(미화 1천950만 달러) 규모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음.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현재 25명이 파견돼 의료지원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PRT의 규모를 85명 수준으로 늘리고 임무도 직업훈련 및 태권도 지도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신규 파견인원의 활동에 대비해 병원과 직업훈련센터 등을 연내 신축, 내년 1월부터 의료·직업훈련팀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착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파견되는 지원요원은 의료지원팀 30명을 비롯해 컴퓨터·자동차·전기전자·건축분야 직업훈련요원 10명, 태권도 훈련교관 12명, 기타 지원요원 10명 등임. 태권도 훈련교관은 현지에서 아프간 경찰을 지도하는 인력으로, 전·현직 경찰이 파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정부의 대 아프간 지원 규모는 올해부터 2011년까지 당초 3천만 달러에서 7천410만 달러 규모로 확대된다. 늘어나는 4천410만 달러는 이번에 확대된 1천950만 달러에 내년부터 2년간 추가로 소요될 인건비 2천460만 달러임.
- 외교부는 또 아프간에 순찰용 경찰오토바이 300대와 구급차 100대 등 500만달러 상당의 장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 장비들은 7월 말까지 현지에 도착할 예정임. 장비 지원 비용은 이미 편성됐던 아프간 지원 비용에 포함돼 있음.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지원 확대 방안 외에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 NYT “자이툰 부대 장교 수뢰..한·미 긴장유발”(5/6)

- 이라크 아르빌에서 근무했던 한국 자이툰 부대 소속 장교 3명이 이라크 업자로부터 뇌물을 갈취한 사건으로 한·미 동맹관계에 긴장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 보도했음. 이 부대 소속의 박 모 대위가 지난해 500만 달러짜리 계약을 수주한 쿠르드 업자에게 계약을 종결시키겠다고 위협하거나 감리를 완화하고 공사시한을 늦춰주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회유해 현금 2만5천달러와 800달러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임. 박 대위는 지난달 한국 법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공범인 김모 특무상사와 이모 소령은 이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 받았으나 모두 항소중이라고 NYT는 보도했음.
- 이 사건은 지난해 초 자이툰 부대장의 ‘신속대응프로그램’(CERP)으로 관리돼온 미국의 재건비 7천400만달러의 공사계약과 관련해 전문성이 없거나 훈련받지 않은 한국군 장교들에 의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미군 측이 수사에 착수하며 드러났음.
- 미군 범죄조사대와 국방부 범죄조사서비스, 한국군 조사반이 합동으로 부대를 전면 조사했으며, 지난해 말 관계자 3명이 구속된 이 사건은 연합뉴스가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1월 10일 ‘자이툰 장교 수뢰혐의 구속’ 제하로 보도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 이와 관련해 NYT는, “한국 국방부는 이 사건이 미국 자금을 횡령한 것은 아니며 계약이 이뤄진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 고위 관리는 계약금의 반환과 관련된 것으로 “명백하



게 한국군과 쿠르드족간의 직무상 부당취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 사건이 500억달러가 지원된 미국의 이라크 재건프로그램이 미국의 동맹국에 의해 실제로 도난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주장했다.

#### ● 보즈워스, 6일부터 한·중·일·러 방문(5/6)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이 6일 북한 문제 협의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북핵 6자회담 참가국 방문길에 나섬.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이날 오후 출국, 중국과 7일 협의를 벌인 뒤 8일부터 한국을 방문함.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이어 일본(11일), 러시아(12일)를 잇따라 방문한 뒤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임.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레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 설득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찾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토록 설득하려는 노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6자회담은 실용적인 틀로서 북한은 6자회담 틀 아래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단은 북한을 방문할 현재 계획이 없다”면서 “대표단의 면담 일정은 여전히 조정중”이라고 설명했다.
- 미국 대표단에는 성 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가 포함돼 있으며, 국무부 외에 국방부 등 관련부처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음.

#### ● 정부, 아프간 ‘단계적 지원’ 추진(5/5)

-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지원방안으로 일단 지역재건사업(PRT)팀 확대와 500만달러 상당의 장비를 지원키로 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아프간 지원 방안과 규모를 놓고 고심해온 정부가 ‘단계적 지원’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국민여론과 국제사회의 요구 사이에서 나름대로 절충점을 찾은 결과로 보임.
- 정부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차로 구급차, 오토바이 등 500만달러 상당의 장비지원과 지역재건사업팀(PRT) 규모를 90여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차 지원방안을 의결할 예정임. 이번 지원방안에는 또 기존에 의료지원 중심이었던 PRT의 활동을 건물신축, 직업훈련, 농업지원, 선거 및 치안업무 지원 등으로 확대하는 것도 포함돼 있음. ‘논란의 핵’인 한국군의 재파병 문제나 대규모 재정적 기여 방안 등은 일단 이번 발표에선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일단 이 시점에서 아프간 지원계획을 발표키로 한 것은 아프간을 돕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정부 소식통은 5일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6일 발표되는 것과 별도로 추가로 아프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해 다양한 추가 지원 방안이 테이



블 위에 올라가 있음을 시사했음. 특히 다음달 16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전후로 재파병 여부 등 한국의 아프간 추가 지원 계획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함.

#### ● 정부 “아프간 재파병 검토 안해”(5/4)

- 외교통상부는 4일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국군병력을 재파병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음.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에 아프간 재파병을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미국 정부가 한국측에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면서 “정부는 아프간 재파병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음. 문 대변인은 다만 “정부는 아프간의 지역재건사업(PRT)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 앞서 정부는 현재 24명인 PRT 규모를 90여명 수준으로 늘리고 그 역할도 지금의 의료지원에서 직업훈련과 경찰훈련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 한·미軍, 사이버방어 협력 MOU 체결(5/4)

-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지난달 30일 사이버전(戰)에 대비한 양국 간 상호협력 필요성에 따라 ‘한·미 정보보증 및 컴퓨터네트워크 방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국방부가 4일 밝혔음.
- 국방부 우주하 기획조정실장과 미 국방부 존 그라임스 네트워크&정보통합(NII) 차관보가 체결한 양해각서는 양국군 간 정보 및 정보체계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고 사이버공격의 예측 탐지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보증과 컴퓨터네트워크 방어 정보를 공유하도록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번 양해각서는 해킹과 바이러스 등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 한·미 연합작전지원체계의 상호연동과 정보보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체결하게 됐음.
- 미 국방부는 사이버 침해 대응을 위해 15개국에 참여한 가운데 매년 ‘국제사이버방어연습’을 실시해왔고 우리 군은 작년 4개팀 30여명을 처음 참가시킨데 이어 올해 6월과 10월 실시되는 연습에는 참여인원을 확대할 방침.
- 이번 한·미 간 정보보호 협력 강화로 우리 군의 지휘통신망 교란과 함께 서버 등 인터넷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갖춘 북한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산하의 121부대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양해각서는 15년간 유효하며 상호 합의로 개정·폐기할 수 있도록 했음. 양측은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국방부 정보화기획관과 미 국방부 국제정보보증업무국장을 관리책임관으로 임명하고 과장급 등 담당자로 실무단을 구성해 협력창구로 활용키로 하는 한편 연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정보공유 및 기술교류 등 협력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음.



## 나. 한·일 관계

### ● 韓·日, 이달중 FTA 심의관급 협의 개최(5/10)

-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지난 2004년 11월 이후 중단된 경제연대협정(EPA) 체결협상 재개를 위해 심의관급 실무자협의를 조만간 개최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0일 보도했음. 이는 지난해 2차례 개최된 과장급 협의를 격상해 협상재개 여건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세계적인 경기악화를 배경으로 한국 산업계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전망은 밝지않다고 신문은 지적했음.
- 심의관급 회의는 일본의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한국의 외교통상부 FTA정책국에서 각각 심의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달 중 열린 뒤 연내에 수차례 더 개최될 예정.
- 심의관급 회의에서는 일본의 대한투자 확대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한국이 요구해온 농업분야의 시장개방에 대해 일본측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측은 오는 심의관급 협의를 '본교섭을 위한 최종단계'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신문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을 핵심으로 하는 양국 EPA에 대해서는 만성적인 대일무역 적자를 안고 있는 한국측에서 일본제품의 과도한 유입을 우려, 신중한 자세를 보임에 따라 일본측이 대한투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포럼 등을 개최하는 등 산업협력을 통해 한국측의 이해를 촉구해 왔음. 한일 양국 정부는 2003년 10월 정상회담에서 그해 FTA체결 협상을 개시해 2005년까지 실질적으로 협상을 매듭짓기로 합의했었음. 이후 6차례의 협상이 개최됐으나 한국측이 농업분야에서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일본의 입장에 반발, 중단됐음.
- 그러다 지난해 2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 재개에 합의, 6월 과장급 실무자협약이 개최됐으며, 지난 1월에는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 협상 가속을 합의한 바 있음.

## 다. 한·러 관계

### ● 방한 취소 러, 극동 관구 대표 돌연 해임(5/4)

- 예정된 한국 방문을 갑자기 취소해 '외교 결례' 논란을 빚었던 올레그 사포노프 러시아 극동 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해임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코메르산트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그를 해임했음. 그리고 그 자리에는 빅토르 이사예프 하바로프스키 주지사를 임명했음.
- 사할린 등 러시아 극동지역 10개 주를 포괄하는 극동 관구를 담당해 온 사포노프 대표는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초청으로 지난달 27~29일 방한할 예정이었음. 그는 방한기간 유 장관과 이윤호 지식



경제부 장관 등과 만나고 이명박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방문 3일을 앞두고 갑자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일정이 잡혔다는 이유로 방문 취소를 통보해 외교 결례라는 비난을 샀음. 그는 현 연방보안국(FSB) 전신인 국가안보위원회(KGB)에서 일하다가 90년대 초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청에서 근무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현 총리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남부 관구 전권대표를 지내고 지난 2007년 말 극동 관구 대표로 옮겼고 메드베데프 대통령 취임 후 단행된 인사에서도 자리를 유지했음.

#### 라. 미·중 관계

##### ● 美-中선박, 해상대치 재발(5/6)

- 미국과 중국 선박이 2개월여만에 또 다시 해상대치를 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부 관리들은 2척의 중국 선박이 지난 1일 황해에서 미해양관측선 USNS 빅토리아호에 접근했다면서 당시 중국 선박들은 대치를 풀기 전에 30야드(27.4m)까지 다가왔었다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는 5일 당시 상황과 관련, “중국 선박들이 미국의 해양관측선에 위협할 정도로 가깝게 접근했다”고 밝혔다. 미 해양관측선 선원들은 이에 따라 소방호수로 물을 뿌리며 중국 선박의 접근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 이와 관련,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왔음.

##### ● 中 미국인에 급행비자 제한조치(5/5)

- 중국이 미국인에 대해 급행비자 등 일부 비자에 대한 제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음.
- 주미 중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 “4일부터 당 대사관은 비자발급 기간을 업무일 기준 6일로 변경하고 급행 및 긴급 비자의 신청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적절한 비자정책의 조정은 중국의 법률에 근거한 조치”라면서 “이는 차별대우도 아니고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자정책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정상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것과 중국인과 외국인의 교류에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미국인에 대한 일부 비자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비자정책의 조정이나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 中, 오바마의 언론탄압 발언 반박(5/5)

- 중국은 4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 언론인들이 몹시 시달리



고 감옥에 가고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사실을 존중하고 중국 언론자유 상황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반박했음.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 미국측이 중국 언론자유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국 사법주권을 존중할 것을 희망한다고 답변했다고 중국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사가 보도했음. 마 대변인은 이어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국민의 언론자유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도 어떤 구실을 대고 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과 이란에 억류 중인 미국 국적 여기자 3명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과 쿠바, 미얀마, 스리랑카, 짐바브웨 등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서 언론인들이 몹시 시달리고 감옥에 가고 있는 것은 “슬픈 현실”이라고 말했음.

#### 마. 미·러 관계

##### ● 보즈워스 러시아 방문일정 취소(5/9)

-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을 순방 중인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러시아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8일 밝혔음.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즈워스 대표를 제외한 다른 대표단 멤버들은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음. 보즈워스 대표는 당초 12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정부 관리들과 만나 현안을 논의한 뒤 14일 워싱턴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11일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음.
- 앞서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 대표단이 12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북핵 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정기적인 일”이라면서 “성 김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가 이곳으로 올 것”이라고 밝혔었음.

##### ● 美·러 정상회담 7월 하순 개최(5/8)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7월 하순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7일 말했음.
- 클린턴 장관은 이날 미 국무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핵무기 확산 방지 노력을 포함해 우리 현안들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며 “우리는 관계정상화를 통해 이를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키길 원한다”고 밝혔음.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 지도자들과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구소련의 연방국가인 그루지야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의견차이가 핵무기 감축 등 전략적 협상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



이러면 “그렇게 외교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오래된 낡은 사고”라고 지적했음.

- 클린턴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공통 이해와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인 아프가니스탄, 북한, 중동, 이란에 이르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의견 차이가 있는 그루지야 문제에서도 안정과 안보를 이룩하길 서로 원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가 얼마 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노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는 해적과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번 회담은 지난 4월 양국 대통령이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됐다”면서 7월 하순 양국 정상 회담과 관련, “우리는 곧 구체적인 회담날짜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을 대체할 새로운 협정 준비를 포함해 전략적인 안정을 위한 협상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다”면서 “우리는 또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원하는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클린턴 장관과 회담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예방했음.

#### ●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 방미(5/6)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7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미-러 정상회담 준비 협의차 6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이 보도.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7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만나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그리고 오는 12월 시한 만료인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을 포함한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함. 또 라브로프 장관은 하원 의원들을 면담하고 카네기센터에서 양국 관계를 주제로 연설할 예정임.
- 과거 정권에서 동유럽 미사일 방어(MD)계획,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확대, 그루지야 전쟁 등으로 냉전 이후 최악의 관계를 보인 두 나라는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외교 소식통들은 이번 미국 방문이 18일부터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START 후속 협정 1차 본협상을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협상의 큰 줄기를 두고 미국 측과 협의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바. 중·일 관계

##### ● 日의원단, 일본군의 중국인 학살 사과(5/6)

- 일본의 의원 24명은 5일 77년 전인 지난 1932년 일본군이 3천여명의 중국 민간인을 학살한 랴오닝(遼寧)성 핑딩산(平頂山) 사건의 생존자들에게 사과서한을 보냈음.
- 아이하라 쿠미코 일본 참의원 의원은 이날 랴오닝성 푸순(撫順)시를



방문, 당시 학살에서 살아남은 왕즈메이(88)씨와 만나 거듭 미안하다고 말하고 일본 의원 24명이 서명한 사과서한을 전달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중의원 의원 10명과 참의원 의원 14명이 서명한 이 편지에는 “인간으로서, 일본 주민들이 뽑은 의원으로서 우리는 마음속 깊이 미안함을 느낀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 일본군은 지난 1932년 9월16일 푸순 부근 핑딩산에서 주민들에게 사신을 찍어준다고 그룹별로 모이게 한 후 3천여명의 남녀노소를 기관총으로 무자비하게 학살했음.

## 사. 일·러 관계

### ● 푸틴 “대일관계, 경제가 최우선”(5/10)

-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대일 관계에서 경제가 가장 중요하며, 최대 현안인 영토문제의 해결이 가능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종합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이 10일 보도했음.
- 푸틴 대통령은 11일부터 있을 일본 방문을 앞두고 교도통신과 NHK 방송,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 가진 공동회견에서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리스트를 일본측에 제시할 것”이라면서 일본기업에 의한 극동지역에서의 자동차 공장 건설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음. 푸틴 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후에는 처음으로 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을 방문,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와 수뇌회담을 갖을 예정.
- 푸틴 총리는 일본이 주장하는 북방 4개섬 반환에 대해서는 “난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인내력을 갖고 상호 이익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서로를 신뢰하고 종합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등의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나 자신이 경제와 문화면의 국제관계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역할을 하겠다”며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 등 모든 분야에서 러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사례로 사할린의 자원개발과 동시베리아산 원유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수송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들면서 “금융위기를 겪지만 이런 프로젝트는 연방예산의 지원을 받고 있어 기한내 반드시 완성시키겠다”며 일본측의 투자를 촉구했음. 또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러일간의 협정이 이번 방문 기간에 조인될 것임을 시사하면서 핵연료의 공급과 원자력 발전의 기술지원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나갈 것을 기대했음.
- 푸틴 총리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핵군축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하면서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러시아와 대립하는 친미국가 그루지야에서 합동훈련을 시작한데 대해서는 불쾌감을 표명했음.



## 아. 기타

### ● 李대통령, 우즈벡.카자흐 방문위해 출국(5/10)

-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2개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음. 이 대통령은 4박5일 간의 이번 순방기간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각각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자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양국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
- 이 대통령은 11일 카리모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현지의 수르길 가스전 개발, 나보이 공항 현대화사업 등을 놓고, 13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선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사업, 잠빌광구 탐사사업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 방안 등을 협의함.
- 이와 함께 현지 자원 관련 협정 조인식을 갖는 등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밝혔음. 아울러 현지 동포와 기업인은 물론 우즈베키스탄 젊은이와의 대화 등을 통해 양국간 협력과 이해의 폭을 넓힐 방침.
-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자원 협력을 강화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전하고 인적 교류, 문화 교류 확대 등에도 주력할 것”이라면서 “이번을 통해 신 아시아 외교 구상의 일단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음.

### ● “벨기에 필립 왕세자, 북한땅 밟아”(5/10)

- 방한 중인 벨기에 필립 왕세자가 1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돌아보던 중 짧게나마 북한 땅을 밟았다고 벨기에 뉴스통신사 벨가(Belga)가 보도했음. 벨가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방한 수행단 일행과 함께 판문점 JSA를 방문한 필립 왕세자는 군사분계선 상의 한 막사에 들어가 사진을 찍던 도중 순간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월경, 북한 땅을 밟았음.
- 필립 왕세자가 무의식적으로 군사분계선을 월경하는 ‘사건’이 벌어진 막사에 대해 벨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그가 우리측 JSA에 도착했을 때 북측에서는 3명의 경비병이 사진기와 쌍안경으로 낚신 ‘이방인’ 방문자를 감시했으며 막사 안을 둘러보던 당시에는 모두 6명의 경비병이 창문을 통해 필립 왕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다고 벨가는 전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필립 왕세자의 경호원들은 바짝 긴장했으나 어떠한 충돌이나 항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음.
- 9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한 필립 왕세자는 도착 당일 청와대로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을 예방했으며 이한하는 오는 14일까지 관계와 재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양국간 통상·투자 진흥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 ● **李대통령, 벨기에 필립 왕세자 접견(5/9)**

-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방한중인 벨기에 필립 왕세자를 접견하고 양국 간 관계발전 방안을 논의했음. 이날 접견은 주로 필립 왕세자가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이 대통령의 조언을 구하는 자리였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 필립 왕세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이 대통령이 보여준 놀라운 성과와 활약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를 배우고자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왔다”면서 “세계적 수준인 한국의 정보통신 분야와 녹색성장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위기가 얼마나 더 지속할지 전망하기 쉽지 않지만 위기에는 끝이 있다”면서 “한국은 재정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위기극복에 나서고 있으며, 위기 이후 다가올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녹색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투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양국이 수교 후 제반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확대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80여 명에 달하는 경제사절단을 대동한 필립 왕세자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중소기업 간 상호구매 및 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또 세계적 항만도시인 지부르게항과 안트워프항이 우리 측 평택항 및 인천항과 각각 항만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아시아와 유럽의 물류중심지인 양국 항만간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음.
- 벨기에 왕위 계승서열 1위인 필립 왕세자는 이날부터 5박6일 일정으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방한했으며, 방한기간 관계 및 재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양국 간 통상 및 투자 진흥 방안을 중점 협의할 예정임.

### ● **벨기에 필립 왕세자 9~14일 방한(5/6)**

- 벨기에 왕위계승 서열 1위인 HR.H 필립(49) 왕세자가 오는 9일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5박6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함. 피에르 클레망 뒤 뷔송 주한 벨기에 대사는 6일 오후 서울시내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고 “필립 왕세자는 9일 오후 청와대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필립 왕세자의 이번 한국 방문에는 카렐 드 귀호트 부총리겸 외무장관, 빈센트 퀴큰보르스 경제개혁 장관이 수행하고 루디 토마에스 벨기에 기업연합회 회장 등 기업인 60여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도 함께 방한함. 뒤뷔송 대사는 “필립 왕세자의 방한이 (현재 진행중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나 벨기에 기업의 한국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필립 왕세자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면담할 예정이며 한승수 총리가 주재하는 만찬(11일) 참석에 이어 대덕연구단지(12일), 수원 삼성전자(13일) 등을 둘러볼 예정임.



● “해적퇴치, 혼치않은 남북협력 사례” <WSJ>(5/6)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 남.북한이 연합해 해적으로부터 상선을 구조했다면서 청해부대의 문무대왕함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에 쫓기던 북한 상선을 구조한 사실을 보도. 신문은 전날 문무대왕함이 링스헬기를 긴급 출격시켜 해적의 위협을 받던 북한 화물선 다박솔호를 구조해냈다는 합참의 발표를 전하면서 이는 남.북한(Tw●Koreas)간 혼치않은 협력의 사례라고 전했다.
- 신문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개성공단 등 주요 협력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관계단절을 천명하는 등 그동안 남북 관계가 악화돼 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해부대의 문무대왕함은 지난 4일 오전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에 쫓기던 북한선적 화물선 다박솔호의 구조신호를 포착하고 링스헬기를 긴급 출동시켜 해적을 퇴거시켰음.

● 외교부 “주중대사관, 기밀 유출 없었다”(5/6)

- 주중한국대사관은 작년 12월 대사관 영사부에 머물던 탈북자들이 영사부 컴퓨터의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야밤에 절도·도주한 뒤 20여일이 지나서야 이를 회수한 것으로 6일 확인됐음. 정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기밀누출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사관이 컴퓨터 저장매체를 회수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는 점에서 관련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 당국자는 6일 “사건 직후 본부에서 대표단을 파견해 두 차례 조사활동을 벌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를 조치하고 시설보안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음. 그는 “당시 저장매체에는 과거에 보호했던 탈북자 관련내용이 저장돼 있었으며 나중에 이를 회수했기 때문에 외부로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음. 도난당했던 저장매체 회수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당국자는 “20일 가량 걸렸다”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저장매체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에 관련된 탈북자들이 위장망명자일 가능성에 대해 “모두 진성 탈북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시 이들은 한국행을 기다리며 수개월 동안 영사부에 머물러왔다”고 밝혔음.

● DJ “중국 나서면 북핵문제 해결”(5/6)

- 중국을 방문 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은 6일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다시 한번 북·미 양국과 다른 참가국 접촉에 나선다면 북핵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대에서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핵 해결과 동북아의 미래, 중국에 기대한다’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한국민은 중국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그는 “지금 북핵문제는 중대한 난관에 처해 있고 6자회담은 반신불수



상태에 있다”면서 “그러나 여러 상황을 검토해 보면 북핵문제는 9.19 성명에서 합의된 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이나 미국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미 합의된 원칙에 따라 핵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북미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고 해결이 안되면 모두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은 이미 1994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 당시 북미 제네바회담에서 핵포기를 합의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정권교체로 부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북 적대정책을 추진했다”고 회고했음. 김 전 대통령은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적대정책에 맞서 핵개발을 재개했고 부시 정권은 임기 마지막 2년동안 종래의 정책을 바꿔 6자회담을 구성해 9.19 공동성명에 합의했다”면서 “새로 등장한 오바마 정권은 대북정책을 부시의 방식이 아닌 클린턴이 한 것을 참고로 하겠다고 밝혔으며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여사를 국무장관에 임명했다”고 말했다.
- 김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북한과 미국 등을 설득하여 이미 합의된 내용에 따라 북한 핵문제를 타결시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음. 그는 또 “지금 남북대화가 끊기고 협력사업이 차질을 보이고 군사적 긴장의 조짐마저 보인다”면서 “중국이 남북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화해협력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 이번 강연에는 츠후이성(遲惠生) 베이징대 부총장과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자칭궈(賈慶國) 부원장, 차이진바오(蔡金彪) 중국인민외교학회 부회장,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와 3남 홍걸씨,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박지원 의원, 노웅래 전 의원, 한국 유학생 30여명 등 총 200여명의 주요 인사와 학생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음.

#### ● 몽골 언론인 등 ‘유력인사’ 3인 방한(5/5)

- 몽골의 유력 일간지 우누두르의 자야바트 다씨체룽 편집국장을 비롯한 ‘유력 인사’ 3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임성준)의 초청으로 6일 방한함. 일간 우르딘 소닌의 첸드며 빔브자브 제1편집국장과 척바드르흐 미씩어치르 몽골 국립대학교 생물학대학장 등으로 구성된 몽골 대표단은 6박7일의 방한 기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한국생명과학연구소와 서울대, 동국대, 서강대 등 학교를 방문, 교류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
- 1997년에 창간돼 총12면에 1만 1천부를 발행하는 우누두르는 몽골의 대표적인 일간지로 독자층이 고루 분포돼 있는 중립 성향의 신문임. 1999년 창간호를 낸 우르딘 소닌도 발행 부수가 3만부에 달하는 몽골의 유력 일간지임.
- 국제교류재단 관계자는 5일 “이들 3인은 몽골의 여론을 주도해나가는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어서 양국간 협력증진 및 친한 여론의 형성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청해부대, 소말리아 해역서 北상선 구조(5/4)**

-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 호송 작전을 펼치고 있는 청해부대의 문무대왕함이 4일 오전 해적의 공격 위기에 처한 북한 상선을 구조하는 개가를 올렸음. 합참은 이날 문무대왕함이 아덴항 남방 37km 해상에서 북한선적 6천399t급 화물선 ‘다박솔(DABAK SOL)’호가 해적선으로부터 쫓기고 있다는 긴급한 구조신호를 포착하고 링스헬기를 긴급 출격시켜 50분만에 해적선을 퇴치했다고 밝혔음.
- 합참에 따르면 한국시각으로 이날 오전 11시40분께 5차 호송임무를 마치고 아덴항 인근 국제권고통항로 상에서 감시·정찰활동을 하던 문무대왕함에 북한 다박솔호의 “해적으로부터 쫓기고 있다”는 긴급 호출 신호가 포착됐음. 당시 다박솔호는 아덴항 남방 37km, 문무대왕함으로부터 96km 거리에 있었음.
- 문무대왕함은 신호를 포착한 지 10분 뒤인 11시50분께 링스헬기를 출동시켰고 30분만인 12시20분께 다박솔호 상공에 도착했다. 해적선이 다박솔호를 불과 3km 거리까지 추격하고 있던 위험한 상황이었음. 링스헬기는 위협 기동을 하는 동시에 탑승하고 있던 저격수들이 해적선을 향해 사격자세를 취하자 해적들이 혼비백산 달아나기 시작했다.
- 결국 링스헬기가 현장에 도착한 지 10분만인 낮 12시30분께 해적선은 항로를 완전히 변경해 달아나기 시작했고 헬기는 해적선이 북한선적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위협기동을 멈추지 않았음. 링스헬기는 오후 1시30분 문무대왕함에 복귀하기 전까지 110분간의 작전 비행을 통해 북한 상선을 해적으로부터 완벽하게 지켜냈음.
- 해적선이 멀리 도주하고 나서도 문무대왕함은 쫓기느라 항로를 이탈했던 다박솔호와 3차례에 걸친 교신으로 항로를 제대로 찾도록 안내하면서 보호하는 등 끝까지 임무를 다했음. 북한 상선도 통신망으로 “감사하다”는 뜻을 표시해왔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